

2023. 12. 7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6일 오후 14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식품정책과장

정진숙

02-2133-4700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2매

외식업위생팀장

이용호

02-2133-4715

### 서울시, 검·경과 손잡고 '유흥시설 마약범죄' 근절 나선다

- 서울시·대검찰청·경찰청, 6일(수) 대검찰청서 유흥시설 마약수사·단속 협약 체결
- 상호·소재지 등 마약 범죄 발생 유흥시설 정보를 기관 간 공유, 합동점검 상호 협력
- 서울시, 마약 사건 발생시설에 행정법규 단속 추진해 시민건강과 안전 보호 앞장

- 서울시는 12월 6일(수) 오후 2시,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·경찰청과 유흥주점·단란주점·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·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선다.
  -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%이며,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%이다. 특히 올해 1~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.
  -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,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,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.
- 서울시와 대검찰청,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·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, 마약류 범죄 수사·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.

- 현재 마약사범은 ‘마약류관리법’으로 처벌이 가능하나,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‘식품위생법’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,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.
  
- 이에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.
  
-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점검이 활성화되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.
  
-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